

이 자료는 지난 10월 7일 대한석유협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은태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최근의 정유업계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 편집자 주 -

정유업계 현안 문제

대한석유협회

1. 국내 석유산업 및 경쟁력

- 정부는 석유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또한 수입대체산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국내 석유산업을 육성.
 - 즉,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동년 10월 대한석유공사(현 SK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국내 석유산업 태동
 - 이후 국내 석유산업은 1997년 석유산업이 자유화될 때까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 하에 성장, 발전하였음.
 - 당시 석유정제업은 정부 허가제로 운영되어, 정제시설은 국내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건설되었음.
 - 1970년 22만b/d였던 정제시설을 1990년 84만b/d로 1996년에는 243.8만b/d로 증설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증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 비율은 17.6%로 미국의 70.0%, 캐나다의 48.8%, 일본의 31.3%, 중국의 29.2% 등 외국에 비해 매우 열위에 있어 석유수요의 경질화, 청정화 추세에 대처하기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가 중국수준의 고도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4조3천억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로 투자재원 조달이 용이치 않음.
- 1997년 자유화·개방화와 외환위기에 따른 석유소비 침체와 수입사 가세등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며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 1999년 정유부문에서 M&A가 이루어져 현대오일뱅크가 舊한화에너지 지분 39%를 취

독함.

- 현대오일뱅크는 UAE 국영투자회사인 IPIC社로부터 5억달러(지분 50%) 외자 유치함.
- 1999년 11월 쌍용양회는 쌍용정유 지분 28.4%와 경영권을 사우디 Aramco社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2000년 3월 사명을 S-Oil로 개명
- 2001년 9월 인천정유가 법정관리에 들어감
- 1998년 IMF 위기시, 정유업계 기준 약 1,6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 실시 후 올해 SK(주), 현대오일뱅크 등 영업인력 인원감축 및 희망퇴직 실시함.
- 기타 구조조정 추진 사례
 - SK(주), 2억4천3백만불 외자유치를 통한 SK-Enron 출범으로 가스사업 구조조정 완료
 - LG-Caltex 정유/S-Oil/현대오일뱅크, 각각 판매대리점 합병을 통한 판매조직 Slim 化
 - 자산매각으로 비용절감
 - 현대오일뱅크 부산공장 매각
 - 각 지역별 비효율적 저유소 폐쇄

2. 정유업계 경영실적 및 영업환경

- 국내정유사의 지난 2001년 경영실적은 매출액(법인기준)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42조 9,046억원을 기록하였고, 세후순이익은 2,377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182억원 적자가 확대되어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유부문의 2년간 누적적자폭이 1조원을 상회함.

정유업계 매출액 및 세후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증감률(%)
법인기준	매출액	308,328	311,393	434,931	429,046	△1.4
	세후순이익	6,291	7,161	△2,194	△2,377	적자지속
정유부문	매출액	278,722	281,924	402,286	393,796	△2.1
	세후순이익	N/A	5,170	△4,792	△5,564	적자지속

- 2002년 상반기 정유사의 경영실적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익 규모증가 및 지분법 평가익의 반영으로 영업의 이익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임.
 - 상반기 영업이익은 6,37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838억원에 비해 56% 감소함.
 - 다만 환율하락(1,301W/\$→1,202W/\$)에 따라 환차익이 6,295억원에 달하였고, 지분법 평가익이 3,440억원 발생하였으며 이자비용이 1,446억원 감소한데에 힘입어 경상이익은 1조 1,639억원을 기록하였음.

- 즉, 경상이익에서 영업과 무관한 지분법 평가의 및 환차익을 차감할 경우 실질적인 영업 관련 이익규모는 약 1,904억원에 불과함.
- 2002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4조4,307억원 (20.5%) 줄어든 17조1,698억원을 기록했다.
- 큰 폭의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판매관리비는 1.7%(9,165억원)감소에 그쳤음.

2002년 및 2001년 상반기 국내 정유사 경영실적

(단위 : 억원)

	2002년 상반기		2001년 상반기		증감	
	법인	정유	법인	정유	법인	정유
매출액	188,683	171,698	233,611	216,005	△44,929	△44,307
매출원가	171,527	158,931	211,042	198,439	△39,515	△39,508
영업이익	6,375	3,602	11,838	8,237	△5,462	△4,635
영업외손익	5,264	2,796	△7,877	△7,072	13,142	9,868
경상이익	11,639	6,398	3,960	1,165	7,679	5,233
세후순이익	8,353	4,615	2,498	289	5,856	4,326

- 정유사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저조한 데에는 수요침체에 따라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신속적으로 조정한 반면, 수입제품이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에 기인함.
- 석유수입사는 1997년 1개 → 2000년에 21개사 → 2001년에는 36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신규참여를 준비중인 회사가 다수있음.
- 2002년 상반기 수입사의 판매점유율은 평균 7.6%이며, 최근(8월)에는 12.4%까지 급증하였음. 특히 저유황 경유는 수입사 점유율이 17.4%에 달하고 있음.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변동추이

(단위 : %)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B-C	제품 평균
1998	0.01%	0.03%	0.11%	-	0.05%
1999	0.6%	2.1%	0.6%	1.3%	1.0%
2000	1.2%	4.3%	1.9%	2.3%	2.3%
2001	3.3%	5.8%	5.5%	1.3%	4.2%
2002 상반기	7.0%	8.5%	8.0%	6.6%	7.6%
2002. 7월	7.1%	0.0%	17.9%	12.9%	13.5%
2002. 8월	7.2%	0.4%	17.4%	13.0%	12.4%

- 수입사제품 점유율 확대와 국내제품 위축은 세계 경제침체에 따라 한계시장인 국제 현물 시장에 쏟아져 나온 덩핑물량이 수입사에 의해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불공정한 관세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임.

3.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원유관세 인하 필요성)

원유관세인하는 국내시장에서 시설투자에 따른 고정비를 부담하고 있는 정유사와, 고정비 부담없이 영업하는 수입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Rule을 확립하려는 것임.

1) 우리나라 원유 관세율과 Global Standard와의 괴리

-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시행중인 주요 외국의 원유 관세율을 보면 유럽은 무세, 미국이 0.2%~0.4%, 일본이 1% 내외,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및 중국의 경우에도 무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만 원재료인 원유에 고율의 관세(5%)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기본관세는 무세이나 석탄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 1%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의 원유 관세율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는 무세화할 계획임.
 - 대만은 2001년 자유화 일정 마무리와 더불어 2002년에 원유관세율을 종전의 2.5%에서 무세로 전환하였음. 즉, 1987년부터 단계적 자유화 시행 → 1999년 제품수입 자유화 → 2000년에 Formosa Plastics(FPC)의 정유업 진출로 CPC 독점체제 붕괴됨 → 2001년에 휘발유, 경유 수입을 해금하여 자유화를 마무리 → 2002년 원유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무관세로 전환하여 자유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춤.
- 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원유관세율로 인하여 원유대비 석유제품의 관세율 차이에서도 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및 일본이 2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유럽이 3.5배~4.7배이며, 대만, 중국 등 우리나라 인접한 국가들도 2~8배가 차이 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배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우리나라 원유관세율도 주요 선진외국 및 인접국 수준인 1%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Global Standard에 맞게 국내 관세율 체계를 개편해야 함.

2) 국내 여타 비경쟁 원재료의 관세율과의 형평성 문제

- 원재료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완제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증대, 국제수지 개선 및 국내 산업보호 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관세원칙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국내경쟁이 없는 원재료에는 1~2%, 1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5%, 완제품에 대해서는 8%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생산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인 원유에 대해서만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함.

3)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국내 석유시장 공정경쟁의 틀 확립 필요

- 현행 원유(5%) 및 석유제품(7%)간의 관세율 차이가 2%에 불과해 국내 생산제품과 도입 완제품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바, 원유관세 인하를 통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공정경쟁 Rule 확립이 필요함.
 - 원유관세 인하 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는 수입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원칙적으로 주요 선진국 및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1997년에 시행되어야 했으나, 정부의 세수부족 우려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즉, 원유관세 인하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든지 수입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선행한 정유사와 변동비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된 해외 Spot성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사간 내수시장에서의 공정 경쟁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4) 국제석유위기 등을 감안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 필요

- 국내 석유산업은 국내 에너지 공급 및 석유화학산업 원료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찍부터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석유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음.
 -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는 가격규제와 수입규제, 원유와 제품의 관세차등화 등이 있으나, 정부 위주의 가격규제 및 수입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원유와 제품간 관세차이폭이 2%로 미미하여 소비지정제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임.
- 또한, 주요 해외 선진국은 비상시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석유비축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에 적절한 관세차를 유지함으로써 자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평상시 수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 석유의 특성상 원유보다는 석유제품이 해외정세에 따라 가격 급등폭이 더 커서, 1990년 걸프사태 시에도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37불까지 상승하였지만, 석유제품(등유)은 배럴당 70불까지 상승하여, 만약 국내에 정제시설이 없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임.
- 따라서, 최근 이라크 사태 등으로 석유 수급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 현 시점에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국내에서의 석유제품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수급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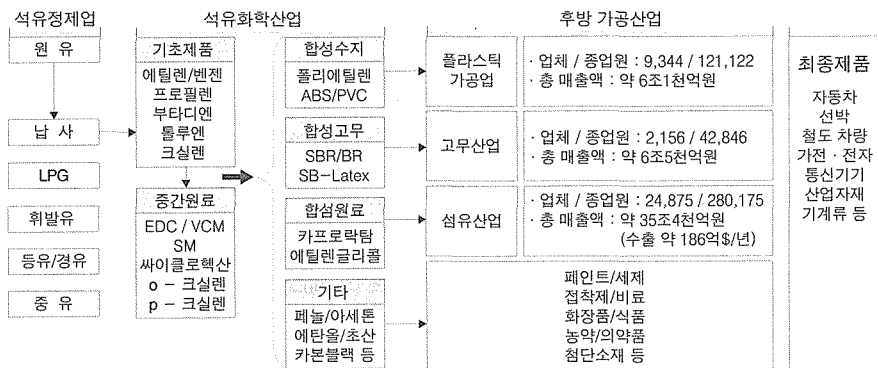
5)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

- 원유관세 1%가 인하될 경우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2.2W/l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원유관세 완전철폐의 후생효과는 포기되는 세수 1원당 1.258원의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로 연결되어 농림수산물, 광산품, 목재, 화학, 전자 등 18개 비교대상 품목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조세연구원에서는 요금 10% 인하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원유가 0.25%로 전신전화 0.1%, 부가통신 0.04%, 전력/가스/수도 0.22% 등 다른 품목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품생산이 자국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GDP증가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관세율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차등관세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비상품 수입보다는 원자재 도입을 통한 국내 가공도 및 국내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세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

6) 석유수급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 조세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5년 및 1998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석유산업의 생산과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995년 석유산업의 생산과급효과는 1.2이며, 1998년에는 1 수준임.
-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석유산업 산출액이 100억원 감소하면 이에 따라 석유제품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산업들의 생산에 발생하는 애로로 인한 생산감소가 누적적으로 120억원에 달하며, 국내 전체적으로 220억원의 생산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큰 생산과급효과는 만약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

석유정제/석유화학산업 관련 제품 및 후방산업



할 경우 부가가치 흐름상 매우 큰 누적적 애로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전반에 걸쳐 상당히 큰 생산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비지정제주의의 경제적 근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석유제품의 공급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산업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므로 국내에 적절한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됨.



7) 고도화시설에 대한 투자 동기부여 가능

- 관세의 가장 큰 역할은 산업의 자원배분을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임. 물론 모든 관세가 철폐되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최적의 상태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관세라는 정책수단이 다른 목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경우 각 산업의 자원배분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또는 정책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원유를 정제하는 석유정제업의 경우 고도화 시설에 대한 투자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이 없는 석유 완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고도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관세의 역할은 이러한 일시적인 자원 배분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체의 요소배분 차원에서 이러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정책이 원하는 곳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석유산업의 자유화와 함께 저황중유의 공급지역 및 시행시기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고 있었음.
 - 그러나 관세는 1990년 중반에도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동일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석유산업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8) 정부의 세수부족 우려에 앞서 현행 석유류의 높은 세금비중 및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분 등의 고려 필요

- 원유관세 1% 인하시 연간 약 1,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세제

개편(2001.7~2006.7)을 통하여 석유제품에서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세수규모가 연평균 2조원(해당기간에만 총 10조원 이상)인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원유관세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약함.

- 한편, 우리나라 총 국세(2001년 기준) 중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16.8%에 달하며, 특히 휘발유 등에서 거둬들인 교통세가 11.5%에 달하는 등 우리 조세구조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접세인 석유류 세금에 집중된 문제점이 존재함.
- 특히,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1,267W/l 수준으로 OECD평균 905W/l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OECD 28개 국가중에서 1인당 GDP는 다섯 번째로 낮으나, 휘발유 소비자가격 및 세금 규모는 4번째로 높은 실정임.
 -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소비 지출(1000을 기준)중에서 휘발유 소비 비중이 1995년 22.7에서 2000년 41.4로 80%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인상(1995년 327W/l → 2000년 745W/l / 2002. 9월 859W/l)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금액이 1995년 84천원/월에서 2001년 140천원/월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은 IMF이전 세금이 인상되기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상황임.
- 즉, 석유류 소비자들이 연간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16조원에 달하고, 원유관세 인하시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분(세수 1원당 1.258)이 정부 세수감소 규모보다 더 높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감안할 경우 조속히 원유관세를 인하여 국민들의 연료비도 절감하고, 우리나라 원유 관세율을 Global Standard로 맞추어야 할 것임.

9) 조세연구원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 관세율 연구' 주요내용

- 조세연구원은 주종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치에 기초하여 소비지정제주의를 견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고도화시설에 대한 자원배분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효과 및 생산과파급효과, 물가과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원유 관세를 무세 또는 저율로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가격 및 수입규제가 철폐된 국내 석유산업에서 소비지정제주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관세 차등화가 유일함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원유관세 인하로 포기되는 세수 1원당 실질 소득증가가 1.25로서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유수입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수입가격 하락에 비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물가하락 효과가 훨씬 큼. ♣